

##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지원 대폭 확대”

최근 유가급등과 관련해 진범 재정경제부장관,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차관, 강길부 건설교통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의 유가 폭등이 경제성장, 물가, 국제수지, 대외경쟁력저하 및 국민 부담 증가 등 우리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강력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소비의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종합대책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따라 Contingency Plan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유가전망과 관계없이 에너지소비절약과 이용효율화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는 근본적인 에너지절약 방안으로 산업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의 5%에서 10%로 확대키로 하고,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급회사의 수요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효율 제품에 대한 리베이트제도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또한 대형건물 등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에 290억원의 에너지절약시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내년부터

는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투자 자금으로 매년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체에너지자원의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금지원을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홍보 및 지도 등은 하반기부터 전국 중소규모 도시까지 확산시키기로 하는 한편 현재 일부만이 참여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운행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활용해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통한 사회·경제의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을 실천해 나가는 한편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의 국제원유폭등과 관련해 외교경로를 통해 유가폭등이 세계경제의 안정을 저해하고, 산유국의 이익에도 해가 된다는 점등을 산유국들에게 강조하면서 유가안정 및 증산촉구를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해 온 바 있다.

또한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온 석유·가스개발사업 등이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 동북아 협력등을 강화해 석유·가스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국·일본 등 동북아 에너지소비국간의 공동대응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벤처기업 강화 위한 직제개편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와 벤처중소기업 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자원부 직제를 개편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전자상거래과는 전자상거래 국가정책 법령 표준화 및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전자상거래총괄과와 B2B B2C B2G 진흥과 지방의 전자상거래 확산업무를 관장할 전자상거래지원과로 확대 개편된다.

또 산업인력수급 및 인력양성기능, 중소벤처정책과 산업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산업혁신과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유통서비스산업과는 유통서비스정보과로 산업표준안전과는 산업표준품질과, 품질디자인과는 디자인브랜드과, 섬유생활산업과는 섬유패션산업과, 생활전자산업과는 디지털전자산업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출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마산과 익산의 수출자유지역관리소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변경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2개과가 신설되고 16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산자부는 42개과 603명 정원으로 확대된다.

기술표준원의 경우 시험검사부서 3개부와 표준안전관리부서 2개가 통폐합, 표준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현재의 화학부, 기계금속부, 차세대산업부, 표준부, 안전계량부는 기초기술표준부, 생물화학기술표준부, 자본재기술표준부, 전자기술표준부, 적합성평가부로 개편된다.

이밖에 산자부는 조직개편안에 본부와 기술표준원의 4급, 5급, 6급 각 5명씩 총 15명을 행정기술직과 연구직으로 복수직렬화하고 무역위원회 5명(5급)을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산업자원부, LG전선(주)등 30여 업체간 '자발적협약' 체결

산업자원부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홍경) 대강당에서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을 비롯해 (주)고합(대표 박웅서), LG전선(주)(대표 권문구), 대상(주)(대표 고두모)등 30개 업체(32개 사업장)와

관련 인사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2000년도 제2차 '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한화석유화학(주)의 VA추진

사례가 발표됐으며 정부와 업체간의 자발적협약추진시 장애요인과 정부의 지원시책이 기업에 기여한데 대해 상호이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이번 협약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각 업체 대표와 정부를 대표하는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발적협약의 협약서'에 서명한 후 교환했다.

협약기업들은 올해 처음 도입된 '선협약' 방식에 따라 협약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자발적협약자문위원회'에서 이를 평가·심의하여 협약체결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되며 금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5년간 총 6백47억원을 투자해 1백87천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절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협약기업에 대해 이자율 5.5%의 에너지절약시설자금(3년거치 5년분할 상환)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산·학·연 합동으로 구성된 전문기술지원단의 기술자문과 기업의 이미지제고 홍보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발적협약제도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이 정부측과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기업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한 후 그 추진일정, 실행방법 등을 제시하게 되면 정부측

은 자금등을 지원함으로써 상호협력하에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절약 제도로 미국·영국등 선진국에서는 수년전부터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제인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15개 사업장의 협약을 시작으로 이번 협약체결까지 총 1백44개 사업장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들 업체의 에너지소비량은 산업부문의 35.5%를 차지하는 3천5백만Toe(석유환산톤)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자발적협약'을 오는 2003년까지 5천Toe(석유환산톤)이상 소비하는 7백14개 사업장 중 5백67개 사업장과 체결함으로써 총 3조원을 투자, 매년 약 8천억원을 절감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 도모는 물론 산업부문의 기후변화협약의 대응시책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산자부는 이 제도 확산을 위해 협약주체를 정부에서 지자체로 확대·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30여개 사업장,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운동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한전을 비롯 10여개 기관(44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다.

## 한·일, '투자협정' 체결 합의

한국과 일본 기업의 상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한일투자협정(BIT)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양국은 서울에

서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본회담을 갖고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투자당시 최혜국 대우 등의 투자자 보호와 송금문제를 포함한 투자자유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법인설립 단계전에도 내 국민 대우 등 각종 투자보장 혜택부여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일본기업들의 한국내 투자에 대한 최대 걸림돌이 제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인들은 상대방 국가에서 창업할 경우 창업 후는 물론 창업전 부터 내국민 또는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투자이익 송금보장 투자관련 인력교 환 등의 안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접점이 이뤄져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보다 높은 수준의 한일 투자협정의 조기시행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현재 업종별 투자허용 범위를 예외로 두는 문제와 노사분쟁시 내국민 대우 부여 여부 등 몇몇 핵심 쟁점사안에 대해선 차기 협상에서 구체적인 의견조율을 거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협상초기 투자협정 체결에 다소 소극적이던 일본이 최근 지리적 근접성 등 투자환경을 고려해 한일투자협정의 연내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경제분야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기업간 분쟁해결 기구 선택방식, 노동문제 및 투자자유보 리스트 작성작업 등의 금융분야에 대해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2년 시작된 일본인들의 대한국 투자(누계치)는 2000년 8월말 현재 5,950건(신고기준),

94억5,100만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올들어 8월말 현재 일본인의 대한국 투자는 지난해 237건, 5억 8,200만달러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404건, 13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대일본 투자역시 지난 '98년 20건(신고기준), 2,400만달러 '99년 37건, 9,800만달러에 이어 올들어 7월말 현재 73건, 4,8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및 투자보장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이 체결될 경우 저임금을 겨냥한 노동집약적 산업보다 첨단 부품·소재관련 일본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한 관계자는 "부품소재 산업을 포함한 첨단기술 제조업과 문화 및 정보통신이 결합된 소프트산업의 유치가 활발해 질 것"이라며 "이는 날로 심화되는 대일 부품소재 수입의존도를 감소시켜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국내 업체의 대일 진출 및 투자확대는 일본에 비해 경쟁력을 지닌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벤처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일본과 한국의 벤처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교류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은 일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자본유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청, '중企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단순화하고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운영에 신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범위기준을 확대하고 농업 등 1차 산업의 범위기준을 신설하여 앞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종업원기준 외에도 자본금과 매출액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농업 등 1차 산업과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내지 300인 미만 또는 연간매출액 50억원 내지 300억원 이하로 규정됐다.

복수기준을 통해 단일기준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제도운영에 신축성을 확보하여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인 범위기준 운영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종업원 특례기준도 대폭 축소하여 범위기준이 단순화된다.

제조업과 건설업·운수업·광업의 종전 152개 종업원 특례기준이 전면 폐지되고 종업원 300인 미만으로 단일화 된다.

서비스업도 최대 기준을 300인 미만으로 하고, 종전의 종업원기준 6단계(47개 업종)가 5단계(29개 업종)로 단순화된다.

정부는 이와같이 특례기준을 폐지하고 범위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개별 업종별 범위 확대 수요를 차단, 업종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의 범위기준도 확대된다.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과 산업지원서비스업(창고업 등) 및 유통업(종합소매업 등)의 범위기준이 확대 또는 현실화 되는 것이다.

정부가 서비스업의 범위기준을 확대한 이유는 서비스업의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기반 마련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약 12,500개의 기업이 새로 중소기업에 편입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왔던 1차 산업도 법인형 사업체의 증가 등 경영형태의 변화를 감안,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신설된다.

이 조치로 1차산업을 영위하는 3,000개의 중소기업이 의무대출비율 적용 등 중소기업지원금융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경영안정의 연속성을 기할 방침이다.

## 중소기업청, 성장유망분야 국내외 정보 제공

중소기업청은 성장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분야의 업종별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

하여 '중기청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통신·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생물산업, 신소재 등 15개 주요전략 업종을 대상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120개 품목을 선정했다.

중기청은 매일 순차적으로 국내외 정책, 기술, 시장동향과 제품 및 업계관련 정보를 제공해갈 계획이며, 우선 8월중에는 생분해성플라스틱 등 30개 품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산업기술정보원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수집·분석·제공하는 체제로 운영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수출시장 개척 등 경영전략수립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실효성 있는 활용이 기대된다.

## 한·일, 계량기 형식승인 상호인정 협약 체결

한국과 일본이 자국의 계량기 형식승인을 상호 인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일본을 상대로한 계량기 수출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은 일본 통상성 계량 연구소(소장 히데타카 이마이)와 한·일 계량기 형식승인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 전자저울 등 계량기의 품질향상은 물론, 대일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99년 1억5,600만달러였던 대일 수출이 향후 연간 3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하던 회사들이 형식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들였던 비용 2만달러가 1천달러로 떨어지고, 형식승인 소요기간도 2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 계량기 생산업체가 350억달러 규모의 세계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해 수출 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향후 일본과 상호인정을 이미 체결한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선진국 및 미국, 캐나다 등과도 계량기 형식승인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도입

앞으로 사무실에서 PC를 통해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등 인터넷 전자입찰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본청 부서장 및 전국지방청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말까지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에 대한 인터넷 전자입찰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여 소액입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전자입찰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이달 중 국가기관 최초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 제도를 한국증권전산 등 3개 인증기관과 협조해 도입하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연간 34만 건에 이르는 입찰서를 업체에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함에 따라 업체 부대비용의 증가 및 행정력의 낭비 요인이 됐다며 그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조달청은 그간 전자거래 추진 노력으로 조달업체와의 전자거래 비율이 65%에 이르고 있었으나

핵심업무인 입찰이 수작업 형태로 이뤄져 전자거래 활성화가 지연됐었다.

조달청은 이같은 전자입찰 시스템 도입의 기대 효과로 △연간 62억원의 직접 비용 절감 △입찰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전체 공공조달의 선진화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 등을 들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우수제품 선정품목을 지난해 394개에서 올해 750개, 내년에는 1,000개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 정부, '조달사업 개정안' 마련

정부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을 우수조달 제품으로 지정해 공공부문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또 오는 11월부터 정부 부처와 일선 행정기관은 물품조달 때 전자조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정부부문의 전자조달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뛰어난 기술력에도 홍보·마케팅력의 부족으로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 공공 부문 구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장이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우수 조달제품으로 지정하면 인터넷, 카다로그, 전시회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는 것 외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즉각 공급체계를 구축,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원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5천만원 이상 물품 구입이나 30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조달요청시 조달청이 구축·운영중인 전자조달 시스템을 의무이용토록 하기로 했다. 수요기관은 정보통신환경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참여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달 관련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키로 했다.